

○ 작성양식(요약서)

소속	시설사업본부 재산용지처	직위	차장	작성자	오현석
사례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이해 관계자	일반국민		소통 채널	이해관계자 공유·소통	
추진 배경	○ 용지보상 시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하던 방법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안전행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추진과정 및 내용	○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 열람권한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홈택스 정부기관 등록 요청 - 1년 간의 기간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행정적 불편을 상세히 설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				
추진 성과	○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예전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게 됨 -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국세·지방세 납입, 지불서류 품의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 ○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최소 1~2일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고객의 불편을 전면 해소 -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				
향후 계획	○ 반기별로 용지보상 이행실태 점검 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On-Line 발급 이행실적 및 관리대장 등을 모니터링 - 지역본부별 미흡한 분야는 분발하도록 독려 -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전 동의서 징구 및 관리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 - 인사전보로 인한 전담 사용자 교체시 권한해지(공인인증서 사용) 및 부여 등을 철저히 관리 -				

사례명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모분야	이해관계자 공유·소통
담당자	재산용지처 용지부 오현석	연락처	(Tel: 042-607-4383)
사례 내용	<p><input type="checkbox"/> 추진배경 또는 목적, 필요성</p> <p>국민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행정편의 주의</p> <p>그동안 공단은 철도건설 적기추진을 위한 용지보상 시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유자들은 최소 1~2일 동안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또한,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30일이 경과될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 해야만 했고, 불만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유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를 국세청, 안전행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공단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p>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 및 애로사항</p> <p>공단에는 발급 권한 없어</p> <p>공단이 국민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려면 국세청, 안전행정부가 공단에 권한을 위임하여야 한다. 권한 위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열람 기능은 가능하나 출력 기능은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또한 공단에서 납입증명서 발급을 시행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여야만 하는 애로사항이 발생된다.</p> <p><input type="checkbox"/> 해결과정</p> <p>안전행정부·국세청과 협업 진행</p> <p>공단은 토지소유자의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안전행정부, 국세청과 협업을 진행해 나갔다. 우선 안전행정부에 행정정보 열람권한을 신청하고, 국세청에 홈택스 정부기관 등록 요청을 했다. 1년간의 기간에 걸쳐 토지소유자의 행정적 불편을 상세히 설명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논리적 설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마침내 ‘14년 6월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열람 및 출력 권한을 안전행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았다.</p>		

<추진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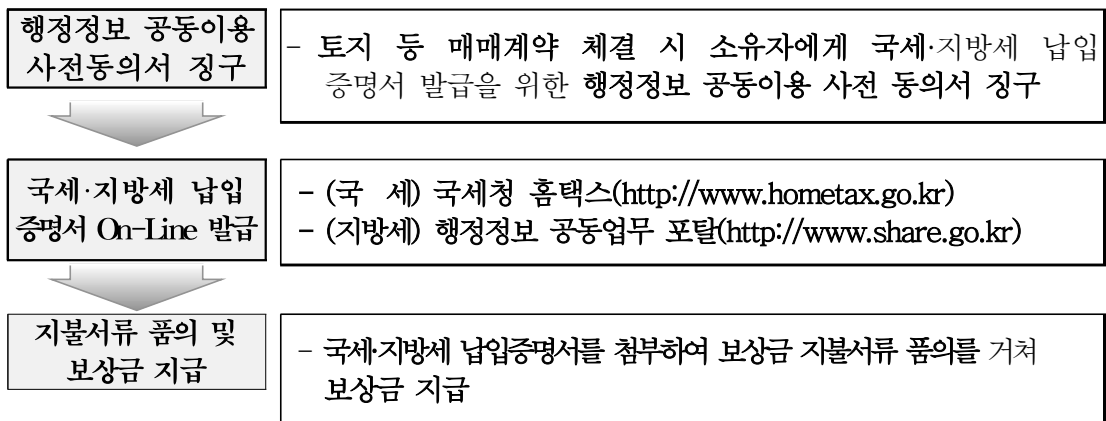
- 2013.08.01. : 행정정보(지방세 납입) 열람권한 신청(공단 ⇒ 안전행정부)
- 2014.01.21. : 국세청 홈택스 정부기관 등록 요청(공단 ⇒ 대전세무서)
- 2014.02.14. : 국세 납입증명 열람권한 획득(대전세무서 ⇒공단)
- 2014.05.29. : 지방세 납입증명 열람권한 획득(안전행정부 ⇒공단)
- 2014.06.20.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출력기능 협의 완료
- 2014.06.23.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On-Line 발급시스템 사용매뉴얼 작성
- 2014.06.27. : 지역본부별 발급시스템 전담사용자 교육 시행
- 2014.07.01. :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 추진실적 및 성과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 간소화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예전보다 편리하고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국세·지방세 납입, 지불서류 품의 및 보상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 보상금 지급 절차>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정보보안은 오히려 강화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본부별로 3명의 전담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사용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를 징구, 보상업무 시 취득한 행정 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담자 사용자 지정 및 변경에 따른 인증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번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안 차원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분기별로 변경하고 있다.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실시간 발급으로 관련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최소 1~2일 관할 세무서와지자체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던 고객의 불편을 전면 해소한 것이다. 또한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 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만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된 것도 성과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On-Line 발급 방법>

- 국세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지방세 :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털(<http://www.share.go.kr>)

□ 향후계획

반기별로 용지보상 이행실태 점검 시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On-Line 발급 이행실적 및 관리대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역본부별 미흡한 분야는 분발 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전 동의서 징구 및 관리상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인사전보로 인한 전담 사용자 교체시 권한 해지(공인인증서 사용) 및 부여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분임)공동이용관리자 ☐ 업무보조자 ☐ 업무처리담당자
※ 해당 직무에 표시

(부서)_____ (직급·직위)_____ (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으로 철도건설 용지 보상 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제출 받아오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오는 7. 1부터 공단에서 직접 발급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 그 동안 공단은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소유자에게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소유자들은 최소 1~2일 동안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를 방문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납입증명서 유효기간 30일이 경과될 경우 재 발급하여 제출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 해야만 했다.
- 공단은 소유자들의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공단 발급 서비스”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고, 국세청 및 행정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국세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는 행정정보 공동업무 포털(<http://www.share.go.kr>)을 통해 공단이 실시간으로 납입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제도개선은 국세청 등 국가부처의 행정정보망 공유를 통한 보상서류 간소화 조치로 소유자의 해묵은 불편 해소는 물론 보상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